

코로나 생계 위기 현실로...저임 노동자들의 '비아'

50대 택시기사 사납금 내면
한달 실수입 30만~40만원 불과
오비맥주 화물운송 노동자
물동량 줄면서 200여명 해고
한달 1만개 배달 40대 택배기사
자택서 숨겨...택배노조 규탄 집회
광주시 긴급생계비도 못 받아
벼랑끝 내몰린 노동자 지원 절실



화물연대대전지부 오비맥주지회 노조원들이 지난 6일 오비맥주 이천공장 앞에서 생존권 사수를 위한 공동투쟁을 벌이고 있다. <화물연대 제공>



전국택배노동조합 호남지부 노조원들이 지난 6일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앞에서 택배노동자 사망에 대한 CJ대 한통운의 책임 촉구 집회를 열고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한 달에 손에 쥐는 건 50만원 밖에 없어 월세도 못내는 형편인데, 월 소득신고액이 190만원이라 ‘광주시 가계긴급생계비’를 지원받지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합니까.”

법인택시회사에 택시운전을 김모(51)씨는 코로나19 때문에 당장 생활고에 부딪혔다. 코로나 19 여파로 손님이 뜰 줄기면서 지난 2월에는 고작 30만원을 받았다. 3월에는 더 열심히 뛰어도 50만 원만 손에 쥐었다.

당연히 광주시의 ‘가계긴급생계비’ 지원을 받을 줄 알았다. 김씨 같은 1인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이 175만 7194원 이하면 받을 수 있다. 그거라도 받아 생활비에 보태면 숨통이 트일 것 같았다.

기대는 크게 빚나갔다. 김씨의 월 소득액은 190만원이라 지원금 지급 대상이 안된다는 답변을 광주시로부터 들어야 했다.

김씨가 이처럼 적은 급여를 받는 데는 김씨 회사가 ‘사납금제’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으로, 광주지역 모든 택시회사가 ‘전액관리제’를 진행하고 있다는 광주시 입장과 다른 대목이다.

김씨는 매일 택시를 몰며 벌어들인 수익 중 19만4000원을 회사에 납입해야 한다.

한 달 25일을 기준으로 회사에 내는 돈, 이른바 ‘사납금’이 485만원이다. 회사와 김씨는 사납금을 모두 내면 월 급여로 190만원을 받을 수 있도록 계약을 맺었다. 하루에 택시 수익으로 20만원을 벌었을 경우 사납금을 내고 남은 돈 6000원의 60%가 택시기사에게 돌아간다.

하지만 코로나19 때문에 사납금을 채우는 게 여의치 않다는 김씨 등 대부분의 택시기사들 얘기다.

김씨도 매일 채우지 못한 사납금을 월 급여에서 뺏더니 30만~50만원을 받게 된 것이다. 회사측도 해결할 방법이 없고 광주시도 대책이 없다는 입장만 내놓을 뿐이다. 광주시가 택시회사 사납금제를 없애고 전액관리제(월급제)를 추진했다면서 실제 현장에서는 사납금제가 그대로 유지되다보니 부작용이 빚어지고 있는 것이다.

김씨는 “택시회사들이 실시한다는 ‘전액관리제’도 일정 수입을 올린 기사들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제도”라며 “코로나19 여

파로 힘들어하는 택시기사들을 위한 실질적 지원책이 절실하다”고 호소했다.

‘코로나19’ 사태로 노동자들이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특히 고용 안정성이 낮은 특수고용직 종사자들과 저임금 노동자들의 생계의 위협을 받고 있지만 정부 대책의 은기는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호받지 못하는 노동자들=코로나19 여파로 시민들의 야외 활동이 줄면서 급격히 늘어난 택배물량을 배달해온 택배노동자가 숨졌다. 택배노조와 동료, 유족들은 과로사를 의심하고 있다.

7일 전국택배노동조합 호남지부에 따르면 CJ대한통운 광주 장수터미널에서 근무하던 A(42)씨는 지난 4일 새벽 자택에서 의식을 잃어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숨졌다. 심정지로 인한 돌연사가 주요 사인으로 추정됐다.

어린이날인 5일, 가족들과 모처럼 휴가

를 내고 제주여행을 계획했던 터라 가족들의 충격은 더욱 컸다.

노조 등에 따르면 A씨가 최근 3개월 간 배송했던 배송물량은 지난 2월 9960개, 3월 1만1330개, 4월 1만 288개에 달한다. 하루평균 배송물량만 420개가 넘는다. 택배 분류작업도 배달기사의 몫이라는 점에서 A씨의 하루 평균 근무시간은 대략 새벽 6시부터 오후 9시까지 무려 15시간에 이르렀던 것으로 알려졌다.

국토부가 지난달 택배업계의 간담회를 통해 택배기사 총원, 적정 근무체계 마련, 휴게시간 보장 등의 내용을 담은 구니고사항을 마련했지만 현장에는 미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나마 A씨는 택배회사 대리점과 직접 계약을 맺은 개인사업자라 고용보험 등에도 가입하지 못했다. CJ대한통운 배달기사의 98%가 A씨와 같은 개인사업자라는 게 노동조합의 설명이다.

양성현 전국택배노조 호남지부 사무국

장은 “법원을 통해 엄연한 노동조합으로 인정받았지만 CJ대한통운과 교섭한 번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노조는 A씨 사망과 관련, 지난 6일 CJ대한통운 물류센터 앞에서 집회를 열고 ▲노동조건 개선 등을 위한 교섭에 나설 것 ▲과로사에 대해 책임질 것 ▲물량 폭주에 따른 대책 마련 ▲배송수수료 인상 등을 사측에 요구했다.

◇거리로 내몰리는 화물차기사들=화물연대 대전지부 오비맥주지회는 지난 6일 경기도 이천공장 앞에서 집회를 열고 화물차 운전기사들의 고용 유지를 촉구했다.

7일 화물연대 등에 따르면 오비맥주 화물운송 업무를 맡고있는 화물차 기사 200여명이 지난 4월 계약이 만료되면서 일자리를 잃었다.

오비맥주는 물량 감소 등을 들어 운송기사들과의 계약을 연장하지 않았다.

오비맥주 화물차 기사들은 오비맥주가

아닌 1차 물류사인 운송사와 직접 계약을 맺은 특수고용직 노동자들이다.

노조 측은 “오비맥주는 줄곧 정식계약을 하지 않고 구두로 합의를 한 뒤 중간에 계약을 해고곤 했다”면서 “기사들은 자비를 들어 오비맥주 요구사항에 맞춰 차량 구조까지 바꾸기도 했는데, 대책도 없이 길거리로 내몰렸다”고 반발했다.

노조는 오비맥주에 화물차 기사들의 대책 마련을 요구하고 있지만 오비맥주는 직접 계약을 맺은 게 아니라 물류사와 해결해야 할 문제라며 난색을 표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영길 오비맥주지회장은 “화물차 기사들이 생계 대책을 마련하느라 고민하고 있는 데도, 오비맥주는 지난해 4390억원의 배당을 실시했다”며 “하루아침에 일터에서 쫓겨난 노동자들에 대한 관심이 절실하다”고 말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분양권 불법 전매나 불법 중개 행위로 주택 분양시장의 거래질서를 교란한 브로커, 공인중개사, 불법 전매자 등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이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이지만 법원이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 정식 재판에 회부했다는 점에서 주목된다.

7일 광주지법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형사5단독 황혜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공판에서 주택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34)씨 등 16명에 대해 각각 150만~500만원의 벌금을 구형했다.

이들은 지난 2016년~2018년 시세 차익을 노리고 전매 제한 기간에 광주와 전

남지역 아파트 분양권을 알선하거나 전매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일부는 불법 전매행위로 500만원을 벌어들인다고 하면, 불법 전매 행위를 알선하면서 수수 명목으로 300만원을 챙기는 등 부당한 이익을 얻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은 공인중개사, 부동산 중개보조원, 보험설

계사, 공무원, 회사원 등으로 시세 차익을 노리고 부동산 불법 행위를 저질렀다는 게 검찰 판단이다.

이날 법정에 선 이들 모두 자신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하지만 이들의 불법 행위로 얻은 부당한 이익과 실수요자들의 피해로 이

어질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벌금형을 구형한 검찰 처분이 미온적인 것 아니냐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온다. 광주시와 경찰 등도 아파트 시장의 비정상적인 과열 현상으로 빚어진 부작용 등을 우려해 지난해 집중 단속을 통해 이들의 불법 행위를 적발했다는 점에서 검찰의 처분과 온도가 감지된다.

일각에서는 법원도 검찰의 약식명령 청구를 받아들이는 대신, 서면심사를 거쳐 약식명령으로 하는 게 적당하지 않다고 정식 재판에 회부한 점에 주목하는 시각도 엿보인다. 이들에 대한 선고는 다음달 4일 열린다. /김지음 기자 dok2000@

광주시, 5·18 진상규명 제보 210건 진상조사위에 이관

광주시와 5·18 기념재단은 5·18 진상규명 제보를 위해 최근 3년 간 전국에서 접수한 제보 210건을 5·18 진상규명조사위원회(이하 조사위)에 이관했다.

광주시는 7일 시청 비즈니스룸에서 5·18진상규명통합신고센터에서 접수받은 신고·제보 내역 이관식을 열고, 그동안 각 기관에 접수된 진상규명 제보 내역을 조사위 송신대 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제보 내용은 ▲행방불명 관련 13건 ▲암매장 관련 48건 ▲월기사격 및 발표 관련 37건 ▲과격진압 관련 8건 ▲성폭력 관련 6건 ▲기타 98건 등이다.

조사위는 앞으로 제보 내용을 진상규명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계획이다. 이날 제보 내역을 전달받은 조사위 송신대 위원장은 “진실을 고백하는 양심적 증언은 5·18민주화운동의 역사적 진실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다”면서 진상규명을 위한 제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조사위는 5·18 당시 국가권력에 의한 반민주적 또는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인권유린과 폭력, 학살, 암매장 사건 등을 조사하기 위해 2018년 3월 제정된 ‘5·18민주화운동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됐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3.1%~8.15% 금리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키겠습니다

각종 불법, 탈법, 고금리로 빌린 무서운 고리채, 그로 인해 고통받는 서민과 소상공인을 신협이 해방시켜 드립니다. 순수 국내자본 신협이, 대한민국 서민을 평생 든든히 지키겠습니다

광주문화신협 ☎ 1644-7990

한국 금융의 힘 신협 815 해방 대출

대한민국 민족자본 신협이 다시 한 번 시작합니다. 1960년대의 신협이 그러했듯, 오늘의 신협 역시 대한민국 서민을 고리사채로부터 지켜가겠습니다. 한국 금융의 힘, 신협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신협의 고리사채 추방운동: 민족자본 신협은 1960년대부터, 서민들의 생활을 옥죄어 온 고리사채의 악순환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을 펼쳐왔습니다.

신협 815 해방 대출은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 대출을 받고 있거나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에게 지원하는 신협의 대표적인 중금리 신용대출 상품입니다.

대상자: 신협 내부심사기준(신용등급 등)을 충족하는 고객 중 ① 타 금융기관으로부터 고금리의 신용대출을 3개월 이상 받고 있는 고객 또는 ② 신규로 중금리대출을 받고자 하는 고객

대출한도: 최대 1,000만원 이내
대출금리: 연 3.1%~8.15% 이내 (고정금리)

필요서류: 재직증명서, 소득증빙서류, 기타 필요 서류

문의처: 문흥지점 266-4150, 양산지점 573-4150, 운암지점 528-4150, 운암산지점 513-4150, 매곡지점 572-4150, 청단지점 576-4150